

# 민주, 의장·원내대표 선출 당원의사 20% 반영

### 당헌당규TF, 당원권 강화 보고 시도당위원장 선출 비중도 높여 대의원대회→당원대회 명칭 변경 강성 팬덤 의존 정치 우려 시선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의 의견을 20% 반영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 팬덤 등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면 당내 민주주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당규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당원권

강화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 20대 1 미만으로 제한,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명칭 개정,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의장 및 원내대표 선출 규정과 관련,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에 최고위를 거쳐 다음 주 당무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발 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은 당내 규정이라서 당무위 의결로 결정되고, 원내

대표 선출 방식은 당헌 사항으로 중앙위원회 개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전 시도당 위원장도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은 50대 50인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수준까지 높여 20대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적어도 권리당원 20표가 대의원 1표와 같게 하겠다는 의미다.

당헌·당규 개정은 명심(이재명 대표의 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해 왔다. 당원의 목소리를 크게 반영해 정치 효능감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나, 다수당에서 입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인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려 당내 민주주의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이에 대해, 이날 퇴임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4·10 총선에 불출마한 이상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퇴임 간담회에서 “당원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야 한 1만 명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 중에 나머지 90~95% 정도는 당원도 아니고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며 “왜 국회의원을 보고 현

법기관이라고 하는지, 누가 뽑은 국회의원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어떤 선거에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이 아니라 상시로 당원 의견이 수렴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대표, 최고위원 등 당직 선거는 당원에게, 선출직 공직자는 민심을 반영해 국민에게, 원내직은 국회의원에게 주는 것이 민주당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내 권력 지형에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장 약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 대표의 연임 분위기도 굳어질 것이라며 강성 팬덤에 의존하는 ‘홍위병 정치’가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조국 “교섭단체 구성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현행 국회 교섭단체 충족 요건(원내 20석)에 대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더불어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총선)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유신



의 잔재이며 그 전에는 10석이었던”이라며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원위치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선진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가 열리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민주당 등 여러 야당과 연대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계속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지원,尹-이종섭 통화에 “이쯤되면 수사 외압·은폐”

박지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9일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 차례 전화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조직적인 수사 외압 및 은폐”라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이라면 당장 수사하고 압수 수색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당이 국민과 운명 공동체가 돼야지 대통령실과 범죄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 부결에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자들을 불러 예산편성권, 거부권이라는 총을 쥐어주고 투쟁을 부추기며 총알받이로 나서라고 한 뜻을 알 것 같다”면서 “22대 국회 시작을 투쟁으로 연다.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고 국회는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형배, 21대 국회 51개 법안 통과 ‘지역 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은 29일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뽑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 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외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융합성 기본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특검 거부 규탄 기자회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 윤-UAE 대통령, 원전·방산 등 15개 MOU 체결

### 용산 청사서 정상회담 가져 “UAE 300억불 투자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9000억원)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민 방한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투자 협력 체계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한국의 산업은행 간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양국의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투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이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 추가적인 투자를 검토 중이며 그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무바달라, 아부다비투자청(ADIA), 두바이투자청(ICD) 등 3대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무바달라는 운용 자산 규모만 2844억 달러(약 38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13위 국부펀드다.

양국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투자 △국방·국방기술 등 4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민 방문했을 당시 양국 정상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다.

양국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다. 경제·투자 분야에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이뤄졌다.

관세 자유화와 의료·온라인 게임 등 서비스 분야 개방, 바이오·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와 아랍 국가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UAE가 최하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며 양국의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협력을 강화했다.

우리 기업은 이를 통해 약 15억 달러 규모, 최소 6척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방호 분야 기술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이행 합의서 개정’도 이뤄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UAE 연방원자력규제청은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UAE 바라카 원전 4기의 상업 운전 경험에 대한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또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한국전력과 에미리트원자력공사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신형시장을 연구하고 사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은 2022년 취임 후 처음이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막 내리는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6.6% 불과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김 의장의 퇴임과 함께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21대 국회는 총 2만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지난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졌다.

제22대 국회는 30일 문을 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개원일에 맞춰 당론으로 1호 법안을 정한 뒤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원 긴급 민생지원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결이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1호 법안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김선욱 기자